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의 운영

백 정 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장

I. 추진 배경

WTO와 FTA로 인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대한 요구는 가중되고 있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세계화된 21세기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각 대학은 특성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고등교육의 발전과 질 제고를 유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지나친 관여는 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학이 특성 있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효율적인 체제로 재구조화하여 대학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사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지난 2004년에 대학규제개혁과 자율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민관 합동의 대학 자율화·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자율화 과제 63건을 발굴·발표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대학의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하여 개선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대학의 일선 현장에서는 대학 자율화의 정도에 대한 느낌이 약하고 정부의 통제가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자율성 확대를 통한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6년 7월 제주에서 교육부와 공동으로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대학자율화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대교협도 자체적으로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과 책무성에 입각한 대학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II. 대학 자율화의 방향

지난 2월 국내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 OECD에서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OECD 보고서는 대학 규제에 대해 정부의 부드러운 접근(soft approach)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모든 대학을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대학의 역량을 증시해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외국의 고등교육 전문가 시각에서 볼 때, 국내 대학의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으며 대학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국제경쟁시대에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과거처럼 정부가 사전 규제하기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자율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과감한 정부 규제의 폐지, 완화와 더불어 사후 규제를

강화하여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하고, 대학들 스스로 책무성을 강화하는 자율통제시스템의 구축이 있어야 한다.

자율성 확대를 통해 대학 본연의 사명인 학문의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본질적인 요건을 마련해 주고, 대학은 자율성 확대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자기성찰과 개혁을 통해 윤리성 확립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 규제와 통제 중심의 대학 행정을 지양하고 각 대학의 자율과 책무성에 기초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지원되어야 한다.

국내 법령 규정방식도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것을 기술하는 positive 방식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기술하는 negative 방식으로 수정이 요구된다.

Ⅲ. 자율화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대학 자율화의 추진을 위해 자율화에 대한 최고 심의기구로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자율화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각 위원회는 대학의 자율화에 관한 문제해결을 통해 대학 자율성 확보라는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 시기까지 임기 1년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1.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대학 및 사회 각계의 대표 2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설립별·기능별·지역별을 대표하는 대학총장과 산업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 등을 포함한다. 2명의 부위원장은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과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으로 하고 있다.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에서는 자율화의 기본 방향과 내용에 대한 심의·결정과 대학 간의 이견 조정, 자율화 사항에 대한 정책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대학자율화추진실무위원회

대학 자율화에 대한 조사, 연구, 자율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교무·학생·입학·총무 등 대학직능별 처장협의회의 대표와 학교법인 및 회계사, 산업계, 언론계, 법조계의 인사 15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자율화 대상에 대한 선정과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있게 논의·연구하며, 자율화의 방안과 건의 사항 도출 등을 통해 대학 자율화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자율화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대학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내부 조정을 실시한다.

Ⅳ. 대학 자율화 대상 과제

대교협에서는 지난 12월에 대학 자율화와 관련한 대학 현장의 의견조사와 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의 검토사항 등을 토대로 대학재정, 대학 운영, 입학제도, 학사 운영, 고등교육정책 등 제 분야에 대한 자율화 과제를 1차적으로 수합하였다. 대학 자율화 과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들 과제들에 대해 대학 자율화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대상과 대학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구분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규제개

〈표 1〉 대학 자율화 과제

구분	현황	
	과제 수	비율
대학재정	38	29.92
대학 및 법인 운영	17	13.39
대학입학전형제도	17	13.39
학사운영	15	11.81
고등교육정책	10	7.87
교원	9	7.09
교육여건 개선	9	7.09
국제화	8	6.30
산학협력	2	1.57
평생교육	1	0.79
편입학제도	1	0.79
합계	12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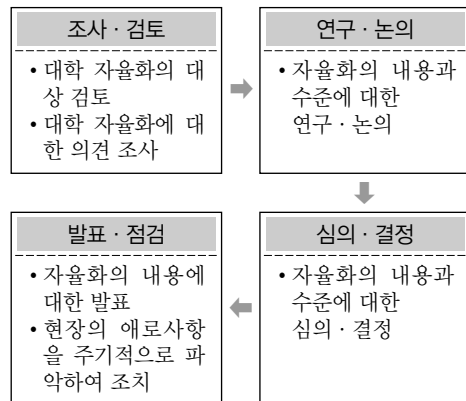
혁 과제는 폐지(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이양, 위임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우선 실무위원회에서 자율화 대상 과제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화추진위원회에서 자율화 과제의 심의를 거쳐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V. 향후 계획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 자율화의 개념과 방향 등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운영계획 및 추진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4월 25일에는 대학자율화추진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 대학 자율화 추진 일정과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향후 자율화 대상과제들에 대해 지역별 총장협의회 회장이 주관하는 대학 자율화 추진 과제 협의회의를 지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대학자율화추진실무위원회의 논의 및 대학자율화추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화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6월까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학 자율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추진될 것이다. **대학**



백정하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고등교육분과 상근전문위원, 감사원 평가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대학총장의 지도성 연구”, “대학교조개혁의 문제와 방향”, “국내외 대학평가 비교” 등이 있다.